



## 제 7차교육과정을 즉시 수정고시하라



김 대 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 I. 수정·보완? 수정고시!

2000년 11월 7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교육 위 의원들에게 7차 교육과정 파동에 따른 대책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박창달 의원 등이 제기한 수정고시 요구에 대해서는 7차 교육과정을 원형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법적으로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수정·보완과 수정고시는 어떻게 다른가? 글자 그대로 수정·보완은 근본적인 법적 개혁 없이 적당히 내용만 부분적으로 손질을 하겠다는 뜻이다. 즉,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담은 각종 시행령·검정령을 하나도 개정하지 않은 채 시행상 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땀질식으로 적당히 교육과정을 운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예를들면 고시를 수정해서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 등에 대해 그 존재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보다는 적당히 수준별 반편성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수정·보완하면서 마무리하겠다는 식이다. 일선 학교 교사들과 전교조, 심지어 지역의 교장단까지 나서서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재검토, 유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명백히 7차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법적으로 개정하라는 요구로 풀이할 수 있다. 수정·보완과 수정고시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돈희 장관과 교육부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한번 밀리면 끝장이다. 한가지도 밀리지 말자.”며 행정관료들이 지휘하는 체제의 ‘7차 교육과정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수천 명의 교사를 강제로 차출하여 7차 교육과정을 억지추향적으로 시행하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학문적 배경이나 통합적 요소가 희박한 기술과 가정을 통합하여 ‘기술·가정’이라는 신규 과목을 만들어 내고 그에 따라 기술 교사와 가

정 교사를 부전공 신규 자격 연수장으로 내몰더니 결국은 지역마다 해방 후 최초로 연수장에서 교사들이 뛰쳐 나오고 연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연수를 철회하는 등 과부하 현상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그 여파로 당장 2001년 3월부터는 이미 신규 기술·가정 부전공 자격증을 교부받은 760여 명의 기술·가정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1만여 기술, 가정 교사들은 기술과 가정을 상호 교환하여 가르치는 순간 불법 상치 과목 교사가 되어 행정 소송에 휘말리게 될 판국이 되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초·중학교에 우열반이 편성되고 심화·보충학습으로 인해 학급 내에서 나머지 공부가 일상화됨으로 인해 이미 학원을 찾은 학생 수가 폭증하고 있다. 고 2, 3학년 과정은 전 과목 선택에 따른 학급 개념의 폐기와 일부 상위 그룹 학생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부가가치는 보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경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과서를 채택하고, 내신과 수능이 있고, 대학 서열화가 있는 상태에서 수준별 수업, 선택교과 수업, 추천입학제, 자립형 사립학교 체제는 사교육비의 못자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순간 학교는 20:80의 체제로 변질될 것이 자명하다. 이돈희 장관과 교육부가 얼마나 국민교육에 대한 의무감을 상실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능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반증이다.

## II. 학교 붕괴 재촉하는 7차 교육과정

1970년대 영·미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절정을 이루었고 교육 역시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나누어 수준별

로 교육 하는 풍토가 만연했고, 학교 교육은 소수의 빌게이츠를 키워 내는 수월성(잘할 줄 아는 것) 교육에 경도되었다. 그러나 협력하는 종합적 인간상이 요구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미국은 1993년 기준으로 공립학교에서의 수준별 교육을 90%대에서 15% 이내로 낮추는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우리의 교육인적자원부는 1995년 5.31 교육 개혁을 통해 1989년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기 시작한 전교조의 보편성(널리 볼 줄 아는)을 추구하는 교육 운동을 영·미에서 수입한 열린 교육으로 덧씌워 지워버리고자 했다. 열린교육은 수행 평가와 학교붕괴라는 파동을 겪으며 스러져 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영·미가 10년 전에 버린 수월성 교육과정을 폐기를 수입하듯 들여와 허접지겹기 습적으로 고시(1997. 12.)하고 말했다. 7차 교육과정을 실제로 입안했던 당사자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의 경험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다기보다는 공개위에 참석한 위원들의 단순한 심사에 의해 고안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하위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학업 성취 증진 효과 미미,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불평등의 재생산, 전인교육에 대한 유해성, 사교육비의 증가 등'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정 개발 주체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수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수준을 가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자연히 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학생들과 부모들은 불안에 빠져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또 단계형이나 심화·보충형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실제로 교과서를 보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따른다. 또한 배우기는 따로 배우는데 내신성적을 내기 위해서 중간·기말고사는 같은 시험지를 이용해서 치르게 되고, 학습 효과 역시 중하위 집단에서는 지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학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금의 수준별 이동수업, 즉 우열반 편성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모자라는 교원 법정 정원수나 교실의 시설 수준을 생각하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교육과정은 그릇된 아이템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교육 내용을 약속한 대로 30%를 줄이기는커녕 단위 시간에 배워야 할 주제 수는 더 많아지고 어려워져서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패의 징후는 7차 교육과정 시범 학교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 11월에 열린 전교조의 '7차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실제로 지정 시범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을 선행해 본 교사들이 증언한 내용은 충격에 가까웠다(시범학교 사례에서 실패작으로 보고된 예는 일찍이 드물다).

『수준별 이동수업 때문에 자기 반 학생의 1/3 정도밖에 접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자기반 학생의 지도가 전혀 안되며, 학급이 붕괴되어 생활 지도가 실종되었다. 시험지를 달리해서 적용해 보았더니 우수반과의 성적 편차 때문에 10점 올려주기 등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같은 수준의 학생이 앉아 있다라도 그 중에 또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학생이 있어서 개별 지도를 하지 않는 한 수업과 평가가 수준별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또한 수준별로 수업을 했으면 평가 단계에서도 수준별로 성취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현행 입시 제도에 따른 평가는 한 가지로만 평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현실과 괴리를 빚는다.

이미 교과 활동에서 수준별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열등 의식으로 아이들의 내면은 황폐하게 변해가는 상황에서, 재량활동으로 또다시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라면 과연 이 수준별 수업에 찬성할 수 있을까?』

문제는 학력에도 있다. 수준별로 나누고 심화·보충을 하고 선택형 교육과정을 한다한들 전체적으로 학력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수의 상위 그룹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아이들이 저하되었을 때 학력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국내의 시범학교나 미국의 어떤 사례에서도 수준별 수업이 학력을 전체적으로 올렸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4조 7천억 원의 돈이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해 투자되고, 그 중 상당한 액수는 열린 교육을 하기 위한 교실 칸막이 설치 등 불요불급한 분야에 쓰여진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길만이 전체 학생의 평균 성적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는 보편적 진실을 외면한 채 우리 교육은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나누고 또 나누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그렇게 나눈다 나누는 목적이 결국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 교육에 있는 한 10명을 놓고 수업하는 학원의 입시 교육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들과 일반적 관료들의 머리속에서 나온 7차 교육과정은 트로이의 목마나 다름없다. 그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이 사회 최후의 그린벨트인 학교가 붕괴되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남을까? 그래도 7차 교육과정은 한번 정해진 것이니까 절대로 수정고시할 수 없다고 믿어붙인다면, 도대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게 7차교육과정은 아이들보다 중요한 존재라는 뜻일까?

### Ⅲ. 7차 교육과정, 근본적으로 고치자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교원의 전문성은 교사가 수업권, 평가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국가 등의 압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학년제와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설정하여 국민이 의무교육 과정에서 누려야 할 행복권과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의무화하고, 국검정 교과서로 교사와 아이들을 엮어매는 정책을 밥먹듯이 해치우는 정부의 월권은 명백하게 교사의 전문직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나아가 교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부전공 연수와 물리적인 교과간의 통합(내지는 병합)은 교사들로 하여금 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하였다. 평가 역시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재량권은 무시될 확률이 높다. 게다가 교원 정책마저 혼선을 빚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을 실행하다 보면 다양한 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겸임 교사, 순회 교사가 급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계약제 등으로 나아가게 될 소지가 다분한데 이에 대한 교원 집단의 전문성 제고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정치적 강령에 불과한 아이디어를 학교 현장에서의 엄격한 검증

없이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의 조직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운영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비과학적인 발상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7차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할까?

첫째, 법정 연간 수업 일수와 주당 수업 시수가 너무 많다. 이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 일수와 주당 34~36시간의 수업 시수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게 된다.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현재 학습량의 30%를 줄이겠다는 교육과정 개정 중점 사항도 공허한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특정 과목 위주의 교과 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7차 교육과정 고시에 의하면 고교 1학년의 경우 연간 교과 수업 시간이 952시간인데, 그 중 영·수·국 시간이 408시간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량시간 12단위 중 6단위를 국민공통 기본교과 심화·보충 학습 시간으로 배정하였고 4단위를 일반 선택 과목 이수에 배정하였다. 따라서 영·수·국을 더 많이 선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최대 170시간 정도). 더욱이 영·수의 경우 공통 기본교과-일반선택과목-심화선택과목이 서로 연계되어 각 단계별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 학년마다 관련과목 수업을 들어야 다음 단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따라서 걸어서는 선택과목인 이들 과목이 실질적으로는 고교 전 과정에서 필수일 수밖에 없고, 영·수·국 위주의 교육과정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쳐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의 관건이 되는 교사 수급·학교 시설 확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다. 즉,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사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교사의 업무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어

는 정도를 교사의 적절한 업무량으로 생각하는지 등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순회 교사, 기간제 교사, 명예 교사, 산학 겸임 교사 등과 같은 교사 임용의 유연성 확보와 부전공 연수를 마치 유일한 대안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한데, 이는 교육의 특수성을 망각한 천박한 접근이 아닐 수 없는, 7차 교육과정이 유보되어야 할 이유 중의 하나이다. 넷째, 학생들의 선택권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 학생들이 듣기 편하고 입맛에 맞는 과목만 원하는 경우, 특정 과목만 편중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아니면 외국처럼 심화 선택 교과목은 대학에서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연계 방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 선택 과목들은 특정 과목 위주로 편성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취지와도 별로 맞지 않는 폐단이 있다. 다섯째, 학제를 개편하고 국검정 교과서 체제를 개편하여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으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무상의무교육)은 12년제로 하고 선택교과의 남발보다는 현재의 인문계(문과·이과), 예체능계, 실업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학제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재량활동에 대하여는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의 근간으로서의 학교급별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그에 따라 교과목의 목표와 수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없애는 데 그 골자가 있다. 국가에서는 학년별로 평균 수업 시수나 단위수를 정하지 말고 학교급별 각 과목의 단위수의 상·하한선만을 정해 주면 된다. 그래야만 교사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다수의 과목 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과목의 신설과 통합에 대하여

는 보통의무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수요자 중심이나 학생의 선택권을 내세우는 것은 공교육의 정신을 버린 것이다. 각 과목의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걸로만 번지르르한 교과 체계(10개)가 아닌 과목(20개)으로 하여 교육과정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 통합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을 강제로 통합하기보다는 교과가 아닌 과목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와 교육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각 교과목의 수준을 정하고,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7차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사 단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재평가를 공개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준비되고 있는 교과서 제작을 중지하고, 당분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될 때까지 2001년부터는 원래의 6차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부분 개정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도 수정고시해야 한다. **대학**

#### 김대유

청주대 사범대 한문교육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서문여중 교사로 전교조 정책위원을 역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자문기구 '교직발전종합방안추진협의회' 위원,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교육평론서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지금 아이들은 우리결에 없다』 등이 있다.